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 뉴딜의 제안

정준호(강원대학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충격에 의한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뉴딜의 3대 프로젝트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제시했다. 이는 디지털 뉴딜이라 할 수 있고, 대경영 영역을 중심으로 한 바운스 백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운스 백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고용보험·실업부조 확충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향후 코로나 충격에 대해 2~3년의 대응 시간을 설정하는 한국판 뉴딜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그런데 회복의 방향과 요소에는 지역 뉴딜이라는 바운스 포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리쇼어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극화된 산업기반을 토대로 한 순환형 지역경제권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 글로벌 분업, 기존의 성장경로를 감안하면 지나친 분산은 불가능하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을 기준으로 성장-분배 엔진을 배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의 2차 충격, 3차 충격은 물론 전염병의 주기적 확산이 문제가 되는 위험의 뉴노멀 시대가 되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대응의 실행체계를 지휘하는 4차 종합병원과 같은 공적자원을 이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광역 지역에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재능 있는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지역과의 연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존 바이오산업은 이미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나 진단 시약의 표준화와 대량생산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종합병원과 같은 보건 의료 인프라는 이런 생태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생태계 인프라는 잉여와 여분을 갖췄다는 원칙에 따라 전국 차원에서 배분하여 가능한 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순환형 지역경제는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와 같은 자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순환형 전력(에너지), 교통 및 통신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의 건설 투자가 요구된다. 가령, 철도 투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인프라 투자이면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투자이기도 하다. 이런 인프라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공공성에 기반한 도시 및 주택 건설(재생)은 지역 차원의 회복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영업은 법인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다

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 농업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런 조직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일정한 중복은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런 중복 또는 잉여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공적보험 장치로서 복지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확장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의 중간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로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공적 복지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주지하듯이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오염물질의 증가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쳐 의료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망률을 높인다. 이는 또한 잠재적으로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공간적으로 넓고 시간적으로도 장기 지속한다. 따라서 단기 시간 지평이 아니라 장기 시간 지평을 감안하여 보건의료와 자연재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